

## 「급진자유주의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평

김 동 춘

전반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시장을 구하자”(브로델, 왈러스타인의 명제)는 명제가 연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장점을 고민하면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고민하는 이탈리아 정치학자 보비오를 연상시키며,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공동체주의의 장점으로 보완하려는 미국의 보울스, 진티스의 논의와도 친화성이 있는 듯이 보이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와 분리시키는 최장집의 논의와도 친화성이 있는 듯.

### 급진자유주의 기획에 대한 의견

- 시장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동행. 재산권과 시민권의 동행 문제
  - 자본가가 경제의 주역이었던 로크 시절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이미 대자본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현불가능한 관념이 아닌가? 시민권을 제약하는 재산권 행사가 너무나 노골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양자를 동행시킬 수 있을까?
- 경제적 자유주의의 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의 결여?
  - 이것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인 것이 아닌가? 자유주의의 인간관 자체가 어느정도 공동체주의와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단지 감수성으로 양자의 겹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 현실 속에서...
- 시장의 활력이 민주주의의 활력으로 작용하는 문제
  - 시장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시장은 구매력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1인 1표주의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왜곡된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거대 다국적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은 민주주의에

역기능적이다. 이 경우 시장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 주권과 상호주권, 개체를 넘어선 적극적 자유, 공화주의 문제
  - 자유주의는 개체의 절대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개체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단지 상호주관성, 시민의 공민화 테제로서는 달성될 수 없을 것 같다. 확실히 노동자, 피고용자는 개체화되었다. 그러나 만성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개별 노동자는 어디서 공민성을 얻을 것이며, 적극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 획일적 복지가 확실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굶어죽을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획일성 비판은 너무나 편한 자의 소리는 아닌가?
- 도덕주의와 절차주의 문제
  - 한국사회에서 절차주의는 강조되어 마땅하다. 담론적 법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 제정과정의 정치성과 계급성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치는 공허하다. 담론적 법치로 헌법재판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검찰의 과도한 권력 독점이 해소되지 않은채 자유주의의 기본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 민주주의의 과잉의 위험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대안
  -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과 불평등에 의한 민주주의의 과도한 축소다. 급진 자유주의는 확실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했던 지난 50년 동안에 더욱 필요했다. 과거에 자유를 농단하던 세력은 이제는 국가대신 대기업의 힘을 입어 자유를 농단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과잉 발전한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에서 급진 자유주의 기획은 너무 추상적이다. 정치철학은 정치와 경제에 바탕을 두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권위주의, 가족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과 처방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

(성공회대)